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7월 | 조직문화와 공정성

2026 July | vol.163

## Brief

|   |                                                                                                        |
|---|--------------------------------------------------------------------------------------------------------|
| 1 | 공공·민간부문은 비윤리적 친조직원행동이 발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공공부문은 조직동일시의 영향이, 민간부문은 공익적 동기·윤리적 리더십·레드테이프의 직접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남 |
| 2 | 윤리적 리더십은 성과보다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와 함께 작동할 때 효과적이며, 절차적 공정성 강화가 핵심 과제                                    |
| 3 | (사례)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바이오텍, 공정한 인사제도와 컴플라이언스, 유연한 근무제도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 구축                               |
| 4 | 권익위,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을 통해 글로벌 청렴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 상향을 통해 연구자의 전문성 존중과 제도적 형평성 강화    |
| 5 | 정부, 2028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업의 공시 준비 지원 추진                                                     |
| 6 | 미국, 관세회피 단속 강화에 따라 수출기업의 원산지·품목분류 등 준법관리 체계 강화 필요                                                      |

# 목차

|   |          |                               |                                                 |
|---|----------|-------------------------------|-------------------------------------------------|
| 1 | 윤리 체크리스트 | 조직문화와 절차적 공정성                 | 한국행정연구원, 공익을 위한다는 착각: 공공 부문 조직동일시의 인지적 왜곡(2025) |
| 2 | 사례 돋보기   | 공정한 제도로 만드는 조직문화              |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바이오텍                              |
| 3 | 윤리, 지금   | 권익위 동향                        |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 성료                           |
|   |          |                               | 제 12 회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
|   |          |                               | 정부출연연구기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 상향                         |
|   |          | 국내외 동향                        | 2025 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실태 점검 결과 발표                 |
|   |          |                               | 정부,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
|   |          |                               | 미국, 관세회피 단속 강화...수출기업 준법관리 비상                   |
|   |          | 정부,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          |                                                 |
|   |          | EU, ESG 공시기준 간소화...중소기업 부담 완화 |                                                 |
| 4 | 윤리 네컷    | 호의의 경계                        |                                                 |
| 5 | 행사       |                               |                                                 |

## 조직문화와 절차적 공정성



한국행정연구원, 공익을 위한다는 착각:  
공공 부문 조직동일시의 인지적 왜곡 (2025)

- 조직에 대한 소속감(조직동일시)이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성공이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현상)’을 유발, 공공부문일수록 더 주요 연결고리로 작용
- 윤리적 리더십은 ‘무엇을 달성했는가’보다 ‘어떻게 달성했는가’를 중시하는 조직문화와 함께 작동할 때 효과적
- 절차적 공정성 강화와 제도 개선, 윤리 리더십 확산을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의 핵심 과제로 제시

## 공익을 위한다는 착각

### 공공 부문 조직동일시의 인지적 왜곡

조직동일시를 매개로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에 이르는 구조적 경로

공구조모형 경로 개념도



### 01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

공공부문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조직동일시)이 비윤리적 친조직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연결고리로 작용한 반면, 민간부문은 공익적 동기·윤리적 리더십·레드테이프 등이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02

#### 절차적 공정성 강화

절차적 공정성 강화와 제도 개선, 윤리 리더십 확산을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의 핵심 과제로 제시.

# 조직문화와 절차적 공정성

한국행정연구원은 「공익을 위한다는 착각」 보고서를 통해 공공조직에서 개인의 공익적 동기와 조직 환경이 조직동일시를 매개로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경로를 분석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공공부문의 조직문화와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공과 민간부문을 비교·분석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기업 등 민간 조직에서도 조직문화와 공정성을 점검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고서는 공익적 동기(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 윤리적 리더십(공정성과 윤리적 기준에 따른 리더의 행동), 레드테이프(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규정·절차)가 조직동일시를 매개로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구성원은 민간부문보다 규정과 절차에 따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인식 역시 공공부문 젊은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조직을 위해 규범을 위반하려는 경향은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에서 더 높았으나 공공부문은 세대 간 차이가 더욱 크게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비윤리적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부문에서는 조직 환경 요인이 조직동일시를 경유하는 '간접 경로'가, 민간부문에서는 조직 환경 요인의 '직접 경로'가 비윤리적 행동의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는 윤리적 리더십과 공익적 동기가 곧바로 비윤리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보다 '조직을 위한 일이 곧 공익'이라는 조직동일시를 거칠 때 규범 위반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윤리적 리더십과 공익적 동기가 조직동일시를 거치지 않고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레드테이프(행정 분야 등에서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는 현상) 등은 공공부문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상적 조건'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민간부문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회하거나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인식되어 직접적인 비윤리적 행동 유발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공공조직을 만들기 위해 개인의 공익적 동기를 높이거나 조직 환경을 개선하는 1 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 조직환경·제도·교육 전반의 조직 정체성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윤리적 리더십의 가치를 '무엇을 달성했는가'보다 '어떻게 달성했는가'로 재정의하여 절차적 공정성이 조직의 정체성이 되도록 조직문화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는 과감히 축소하되 필요한 규정은 구성원이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운영하고, 실제 딜레마 사례를 활용한 윤리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윤리적 판단 기준 확립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절차적 공정성과 윤리적 조직문화 강화방안으로서 민간 기업도 참고할 수 있다. 오른쪽 체크리스트는 이러한 보고서의 제언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절차적 공정성 점검 체크리스트>

| 구분   | 보고서 핵심 실천 과제                              | ✓                        |
|------|-------------------------------------------|--------------------------|
| 조직환경 | 절차적 공정성을 조직의 정체성으로 확립한다.                  | <input type="checkbox"/> |
|      | 성과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평가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input type="checkbox"/> |
| 제도   | 불필요한 절차는 개선하고, 필요한 규정은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다. | <input type="checkbox"/> |
|      | 조직의 이익을 이유로 규범을 넘는 행동이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 <input type="checkbox"/> |
| 교육   | 실제 업무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한다.       | <input type="checkbox"/> |
|      | 구성원이 스스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한다.        | <input type="checkbox"/>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공익을 위한다는 착각: 공공 부문 조직동일시의 인지적 왜곡 (2025)]

## 참고

한국행정연구원, 공익을 위한다는 착각: 공공 부문 조직동일시의 인지적 왜곡 (2025)

## 공정한 제도로 만드는 조직문화

사례기업: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바이오텍

핵심 키워드: #공정한 보상 #인재경영 #컴플라이언스

- 코오롱 생명과학, 직무 중심 채용·절대평가·360 도 피드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기반의 성과인재관리 체계 운영
- 코오롱 생명과학, ISO 37001·ISO 37301 기반 컴플라이언스와 윤리 제보채널, QR 기반 고충신고 시스템으로 윤리·준법경영 강화
- 코오롱 바이오텍,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직군 전환 평가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보상체계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우수 인재 확보 및 장기근속 기반 마련



##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바이오텍

코오롱 생명과학은 코오롱 그룹의 바이오·제약 계열사로, 코오롱 그룹의 핵심가치인 'One&Only'를 바탕으로 혁신과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운영하고 있다. 조직문화의 방향으로는 'WINNER'를 제시하고 있으며, 리더십, 소통과 협업,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직무 중심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장애 등 개인적 특성과 관계없이 목표 달성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전사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평가와 연계한 360도 다면 피드백을 통해 구성원의 역량 개발과 다양성·형평성·포용(DE&I)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ISO 37001과 ISO 37301을 기반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준법경영을 핵심 경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Risk & Compliance팀과 윤리경영팀을 중심으로 부패 리스크 예방, 내부통제, 임직원 교육, 신고자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윤리 제보채널과 신고자 보호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QR코드 기반의 실시간 고충 접수 시스템을 통해 직장 내 인권침해, 차별, 괴롭힘 등의 사안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경영과 조직문화는 계열사인 코오롱 바이오텍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코오롱 바이오텍은 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에 선정되었다. 해당 인증은 능력 중심의 채용과 관리,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개발 체계가 우수한 기관에 부여된다.

2025년에는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 확장기에 대비하여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군별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직군 전환 평가제도'를 신설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기술직군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직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무체계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 사례로 소개하였다. 제도 도입 후 코오롱바이오텍은 이직률이 2024년 14.6%에서 2026년 최저 6.3%(2026년 4월 고용노동부 보도 기준)까지 낮아졌으며, 근로자 수는 13% 증가하였다.

### <코오롱 생명과학 피드백 및 개인평가 프로세스>



[출처: 코오롱 생명과학, 202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참고

[코오롱 생명과학,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코오롱 생명과학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2026.04.23\)](#)

[한국경제, "코오롱바이오텍, '202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임직원 역량 강화 등 체계적 인재 육성 성과 입증" \(2025.09.19\)](#)

[참여와 혁신, "지속가능한 일터, '시간'을 줄이거나 유연하게"\(2026.04.24\)](#)

## 권익위 동향

### 권익위 활동

####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 성료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공동으로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형 반부패 제도의 국제 확산 성과와 지속가능한 청렴 거버넌스 전략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한국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SDG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 등을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AI·디지털 혁신에 대응하는 신뢰 기반 구축, 포용적 청렴 생태계 조성, 국제 협력 강화 등 차세대 반부패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참가국들은 한국형 반부패 모델의 현지 적용 성과를 소개하며, 국제기구와 정부, 민간이 협력하는 글로벌 반부패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7월 3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4586](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4586)

#### 제12회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청렴, 참여로 이어지는 미래'를 주제로 제12회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중·고등학생 청렴 교육프로그램, 청렴 굿즈, 청렴 영상 등 3개 부문이며, 올해부터는 전 분야에서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고 청렴 굿즈 실물 부문을 신설했다. 작품 접수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총 40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 3,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공모전 12주년을 기념해 청렴 실천 사례와 청렴 문구 등을 주제로 한 국민 참여 이벤트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6월 22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3863](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3863)

### 권익위 정책

#### 정부출연연구기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 상향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을 기존 시간당 40만 원(최대 60만 원)에서 시간당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은 대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해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연구자의 전문성과 공정·청렴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으며, 시행 이후 입법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6월 23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3953](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3953)

#### 202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실태 점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2,2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 전체 공직자 교육 이수율은 96.7%로 집계돼 법정 의무교육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직자와 고위공직자의 이수율은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교육청은 99.1%로 가장 높은 이수율을 기록한 반면 국·공립대는 83.0%로 가장 낮았다. 국민권익위는 교육 부진기관 130곳을 대상으로 교육이행계획 제출과 특별교육, 찾아가는 부패방지교육 등을 실시해 교육 실효성과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6월 29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4247](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114247)

# 국내외 동향

## 반부패 정책

### 정부,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AI 보이스피싱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AI 금융사기, 허위·부당광고 등 AI 범죄에 대한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범죄 징후 공동 분석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국가 AI 전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2026년 6월 2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6074900017?input=1195m>

## ESG

### 정부,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

정부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 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법정 의무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ESG 공시는 거래소 공시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직접 도입되며, 2029년에는 5 조 원 이상, 이후 2 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후 공시를 우선 의무화하고, 제 3 자 인증은 2030 년,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공시는 2031 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초기 3 년간 제재를 유예하는 한편, 파일럿 테스트와 기후리스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한경 BUSINESS 2026년 7월 8일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7070715b>

### 미국, 관세회피 단속 강화...수출기업 준법관리 비상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원산지 세탁, 품목 허위분류, 제 3 국 환적(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 3 국을 거쳐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변경된 것처럼 수출하는 방식) 등을 통한 관세 회피 시도가 늘었다고 보고 수입신고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재도 관세 추징과 벌금을 넘어 민사소송·형사기소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내부고발자는 미국 허위청구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회수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신고 유인이 커지고 있다. 무역협회는 기업들이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을 사전에 점검하고, 오류 발견 시 즉시 시정하는 등 사내 준법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SBSbiz 2026년 6월 21일  
<https://biz.sbs.co.kr/article/20000317834>

### EU, ESG 공시기준 간소화...중소기업 부담 완화

유럽연합(EU)은 중소기업의 ESG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공시기준(VSME)을 채택하고, 의무 공시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도 대폭 간소화했다. 개정 ESRS 는 필수 공시 항목을 60% 이상, 전체 공시 데이터 항목을 70% 이상 축소해 기업의 보고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대기업이 협력사에 요구할 수 있는 ESG 정보 범위를 VSME 수준으로 제한하는 '가치사슬 상한선(Value Chain Cap)'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 임팩트온 2026년 7월 6일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493>

## 호의의 경계



## 2026 지속가능금융 리더십 조찬간담회

국내 주요 기업 CFO와 금융 리더가 지속가능금융·전환금융 동향과 기업의 자본조달 및 재무전략을 논의하는 조찬간담회.

-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UNGC Network Korea)
- 일정: 2026년 9월 3일(목)
- 장소: 더 플라자 호텔 서울, 4F 메이플홀 (서울시 중구 소공로 119)
- 참고: <https://unglobalcompact.kr/events/%ed%96%89%ec%82%ac-%ec%95%88%eb%82%b4/?mod=document&uid=3640>

## 제 15회 그린로하스 ESG 제주대전

친환경 녹색산업과 ESG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 전시·전문가 포럼·강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ESG 전문 박람회.

- 주최: (사)제주ESG경영협회
- 일정: 2026년 7월 30일(목) ~ 8월 1일(토)
-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 참고: <https://lohasjeju.co.kr/welcome>

## 독자 의견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7월호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콘텐츠로 개선하려 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5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① 이번호에서 다룬 주제 또는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 ②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또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 ③ 기타 의견(다뤘으면 하는 주제, 기업 사례 등)

의견남기기 <https://quiz.assist.ac.kr>

2026년 8월 5일(수)까지

(1)'[의견남기기](#)' 페이지에서 응답하시거나

(2)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orea@assist.ac.kr](mailto:korea@assist.ac.kr)) 앞으로

의견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 기프티콘 당첨자 안내

이○리님, 김○현님, 최○혜님, 김○은님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질의 응답

### ★ 국민권익위에 문의하세요 ★

윤리경영 업무 중 궁금했던 제도·해석 사항이 있다면 독자 의견과 동일한 경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취합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 ① 상담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② 상담관지정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③ 사실관계조사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④ 결과확인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부패·공익신고는 ▶ 청렴포털 [www.clean.go.kr](http://www.clean.go.kr)

- ① 부패·공익신고 상담 및 안내
- ② 부패·공익 침해 행위 신고
- ③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청
- ④ 신고 및 신청사건 결과조회